또 '조국 국감'…曺수사·檢개혁 난타전

대검국감…與, 檢 수사방식 비판·野, 철저 수사 촉구
윤석열 출석 "국민 뜻 받들어 과감한 개혁방안 실행"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4일째가 되는 17일 국감에서 여야의 '조국 공방'이 다시 격화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 대검찰청 국감에서 여야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수뇌부가 참석한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렸다.

조 전 장관 관련 검찰의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반대 태도를 보이는 데다, 윤 총장의 동반 퇴진 시나리오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여의도 일각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유출과 과잉 수사를 문제로 삼으며 검찰을 몰아세우는 동시에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하면서 여권의 검찰개혁 요구를 사실상의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 계획 등을 물으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또한 특수부 폐지 등 검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놓고도 대립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소환 불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수사가 아닌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다.

국감에서는 윤 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도 거론됐다.

윤 총장은 "해당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밝히고 명예훼손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 고소 유지를 재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접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해당 기자를 고소한 상태다.

정무위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23곳 국감에서는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상대로 조 전 장관 자녀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과정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가 집중됐다.

과방위의 KBS 국감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 KBS 인터뷰의 검찰 유출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최근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KBS가 조사위를 구성하면서 대응한 것을 놓고 야당이 총공세를 펴자 민주당이 방어에 나선 것이다.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국감에서는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축구 남북 예선전과 관련한 '깜깜이 경기' 논란을 놓고 야당의 추궁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목이 타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李총리,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

오는 28일 '재임 881일'…김황식 전 총리 기간 넘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8일 '최장수 국무총리' 타이틀을 갖게 된다.

17일 총리실에 따르면 2017년 5월31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기를 시작한 이 총리는 오는 28일이면 '재임 881일'(2년 4개월 27일)을 맞는다.

이는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국무총리로서는 최장 재임 기간으로, 직전 최장수 총리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2010년 10월1일-2013년 2월26일, 880일) 기록을 깨는 것이다.

다음 달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로 들어서는 반환점인 만큼 이 총리가 현 정부 전반기를 꽉 채워 일한 셈이기도 하다.

전임 박근혜 정부의 경우 정홍원·이완구·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모두 재임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이 전 총리는 70일 만에 총리직에서 내려오면서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김황식 전 총리가 최장수 기록을 세우긴 했지만, 한승수 전 총리는 재임 기간이 1년 7개월, 정운찬 전 총리는 11개월에 그쳤다.

노무현 정부가 배출한 고건·이해찬·한명숙·한덕수 등 4명의 총리 중에서는 1년 9개월가량을 일한 이해찬 전 총리가 가장 오래 재임한 경우였다.

이 총리는 취임 이후 '책임 총리', '일하는 내각'을 내세우며 정책의 실행력과 현장을 강조해왔다.

'내각의 군기반장'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부처별 현안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촌철살인으로 받아치는 이른바 '사이다 발언' 등이 부각되면서 호평을 얻었고 현재는 여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장병완 "경인사회연구기관, 출산장려금 차별"

국무총리 직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회) 산하 연구기관들의 출산장려금 지원에 차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대안신당, 광주 동남갑)에 따르면 경인사회 소속 26개 기관 중 3분의 1인 8개 연구기관에서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8개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 친화적 기업정책 등을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정부 싱크탱크인 경인사회 소속 연구기관들은 예외였던 것이다.

특히 정부 저출산 문제와 육아정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차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장 의원은 "출산장려금은 기본적 복지에 해당돼 각 기관의 예산여건으로 인해 차별이 생겨선 안 된다"면서 "국가정책목표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경인사회 소속 연구기관에 출산장려금 제도가 동일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공수처 여론전…與 "국민 명령" vs 한국당 "문재인 게슈타포"

與 "한국당 절대 거역 못할 것"…한국당 "대통령 마음대로 수사청"

'포스트 조국 정국'의 핵심 화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놓고 여야가 17일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 처리를 '국민 명령'이라 명명하며 입법 속도전에 주력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해 여권이 공수처 설치에 사활을 걸었다며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의 범위로 되돌리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한국당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90일)이 불필요하다며 이달 29일부터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 충돌사건과 관련한 검찰 소환 불응, 광화문 집회를 고리로 한 한국당 공세도 이어졌다.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이 자행한 의회 민주주의의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게슈타포(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 국가경찰)인 공수처를 만들어 친문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는 영원히 묻힌다. '친문(친문재인)무죄·반문(반문재인)유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청, 검찰청"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손금주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무소속, 나주·화순)은 17일 "국민 밥상·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방사능 오염 여부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풍으로 인해 후쿠시마현에 보관됐던 폐기물 자루가 침수됐고 이 중 여러 개가 강 등으로 흘러갔으나 정확한 유실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장 영상을 통해 내용물이 빠져나가 훌쭉해진 자루들까지 포착되고 있어

폐기물이 고스란히 강을 따라 바다로 흘렀을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손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정부의 책임이다"며 "해수 등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